포괄수가제 당연적용시행에 대한 성명서

○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7개 질병군에 대해 선택적용해 오던 포괄수가제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 당연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을 깊이 우려하는 바이며, 이 제도의 당연적용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다 음

1. 기존의 4개과 7개 질병군에 시행되어온 선택적 포괄수가제를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위한 목적으로 당연적용하겠다는 것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이와 연관없는 7개질병군에 전가시키겠다는 비합리적인 시도이다. 특히 저출산 상황으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산부인과의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켜 인구 노령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다.
2. 그동안의 선택적 포괄수가제 적용은 고위험군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킬 수 있었기에 유지가 가능했던 제도이다. 의원급이 60%가량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원은 단 한곳도 포괄수가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없이 당연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고위험군 환자 진료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시행령(안) 제24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는 해당 진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각 항목(약제·치료재료를 포함한다)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다.이 경우 질병군은 진단명, 시술명, 중증도(重症度), 연령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 집단을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 포괄수가제는 중증도에 대한 분류가 심각하게 부실한 상태이다. 일례로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하거나 전치태반, 임신성 고혈압, 산후출혈, 조기진통, 다태아, 자궁내막증, 심한 골반내유착 등으로 고위험상태에 놓인 환자에 대한 수가의 중증도가 터무니없이 낮게 반영되어 있는 현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될 경우,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3.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이나 신약이 개발되어도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는 포괄수가제의 특성은 신약의 투여, 최신 진료재료 이용이나 시술을 최소화 시키게 되며, 해당 질병군의 진료 질 향상을 억제하게 된다. 이를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무 적용한다는 것은 의료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다. 이

는 해외 환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국내 환자들의 해외 의료쇼핑으로 인한 국부 유출로 이어져 심각한 국가적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다.

4.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포괄수가제 해당 질병군에 제왕절개와 자궁수술이 모두 포함되어 악성수술을 제외한 거의 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의료발전의 저해 등 여러 문제점을 감수하면서도 오로지 진료비 감축만을 위해 도입하려는 포괄수가제의 폐해를 산부인과의 왜곡적으로 편중되어 받게 됨을 의미한다.

5. 정부는 금번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시행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정부는 질병군 분류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차등 수가의 현실화, 정기적인 조정 기전 규정화, 비급여 항목의 적절한 급여화나 예외 항목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적 및 법적 조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한 당위성과 필요절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의 국가적·공적 의무를 방기한 채 오로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만을 목표로 성급하게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무리한 발상과 성급한 정책 추진은 진료의사들로 하여금 고위험 환자군의 진료를 꺼리게 만들 것이며, 합병증 발생 시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여 단기적으로는 관련 분야의 진료 환경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학의 발전과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어렵게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뿐이다.

6. 정부는 위에 언급된 문제점들에 대해 산부인과 유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외 조항과 개선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전문가들의 국민 건강에 대한 총정어린 우려를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장기적으로 크나큰 위해가 끼쳐질 수밖에 없음을 심각히 우려하는 바 이며 강제시행 후 예상되는 많은 부작용들은 정부 및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을 주장하는 자들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2. 3. 19.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